

‘MBC 스트레이트’ 4월 4일 자 보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설명드립니다

2021. 4. 6.

MBC 스트레이트는 4월 4일 방송에서 쿠팡이 입점 판매자와 배달원들을 대상으로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것처럼 보도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MBC 스트레이트의 보도와 관련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쟁점	사실
아이템위너 (한 상품 한 페이지 시스템)	기존 오픈마켓은 한 상품에 수많은 셀러 페이지가 존재하다 보니 고객을 현혹하기 위한 낚시성 정보와 상품평 조작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어왔습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도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해 왔습니다. 쿠팡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한 상품 한 페이지’ 위너시스템 구조를 도입하여 여러 셀러가 동일 상품을 판매해도 표준화된 상품 정보와 상품평은 한 페이지로 유지해 조작과 낚시질을 방지 하고 있습니다.
셀러의 지적재산권	쿠팡은 셀러들의 사진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습니다. 특히 상품평은 특정 셀러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쿠팡에서 상품평은 공정성 유지를 위해 오직 고객들만 작성할 수 있으며, 셀러들은 답글 게시 등 어떠한 관여도 할 수 없는 구조 입니다. 따라서 이를 특정 셀러가 관리했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입니다.
대금정산	쿠팡은 매출의 90% 이상이 직매입 구조 로 되어 있으며, 이러한 직매입 구조는 대형마트의 거래구조와 유사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직매입 방식은 소비자에 대한 제품의 판매를 전제하지 않고 상품의 소유권이 유통업자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대금 지급 기한을 60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최근에 개정된 대규모유통업법 역시 직매입 방식의 대금지급 기한을 60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쿠팡은 이미 이보다 더 짧은 정산주기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타 업체 정산과 비교	판매리스크와 물류 비용 등이 전혀 없는 네이버 등 오픈마켓과 달리 쿠팡의 직매입 방식은 소비자에게 판매가 되지 않아도 모든 리스크와 물류 비용을 쿠팡이 부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 중개료 수수료만 취득 하는 네이버 등 오픈마켓과 동일시하여 비교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선정산	셀러론은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선 정산을 원하는 셀러들에 판매하는 금융상품 으로, 대형마트나 오픈마켓 등에서도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마진율	쿠팡의 마진율이 40%에 이른다 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오픈마켓에서는 물류, 배송, 고객센터(CS) 등의 비용이 셀러 부담입니다. 반면 쿠팡은 이와 같은 모든 물류 비용을 쿠팡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쿠팡은 고객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해 수조원의 적자를 감수하면서 전국 단위의 물류네트워크 투자를 이어왔습니다.
쿠팡이츠 배달료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은 배달료 인화가 아니며, 원거리 보상을 강화함으로써 배달거부로 인한 고객과 음식점의 불편과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 입니다. 배달거부로 인한 고객의 불편과 주문취소에 따른 음식점주의 피해를 방지해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 개편의 목적입니다. 쿠팡은 이번 개편으로 고객과 상점에 추가 부담 없이 원거리 보상을 강화함으로써 배달 거리에 따른 실질적 보상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기사의 몇몇 부분은 기본적인 사실 확인조차 없이 보도되었습니다. 기사는 쿠팡 본사의 소재지를 미국이라고 했으나 쿠팡 Inc.의 본사는 서울 송파구입니다. 이는 쿠팡 Inc.의 법인등기부(certificate of incorporation)나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된 서류만 봐도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또한 닐 메타(그린옥스캐피탈 창립자) 개인 지분을 19.8%라고 했는데 닐 메타의 개인 지분은

0%로, 이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이 또한 SEC에 제출된 증권신고서만 봐도 확인 가능한 내용입니다.

또한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대목도 있습니다. 아이템 워너 관련해 인터뷰를 한 변호사는 쿠팡을 상대로 이 서비스에 대하여 집단소송을 기획하는 변호사인데, 이러한 변호사의 일방적인 주장을 마치 객관적 전문가의 의견인 양 보도하여 보도의 중립성을 크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쿠팡은 사실과 다른 MBC 스트레이트의 보도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면밀한 검토를 거쳐 엄중히 대처할 계획입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